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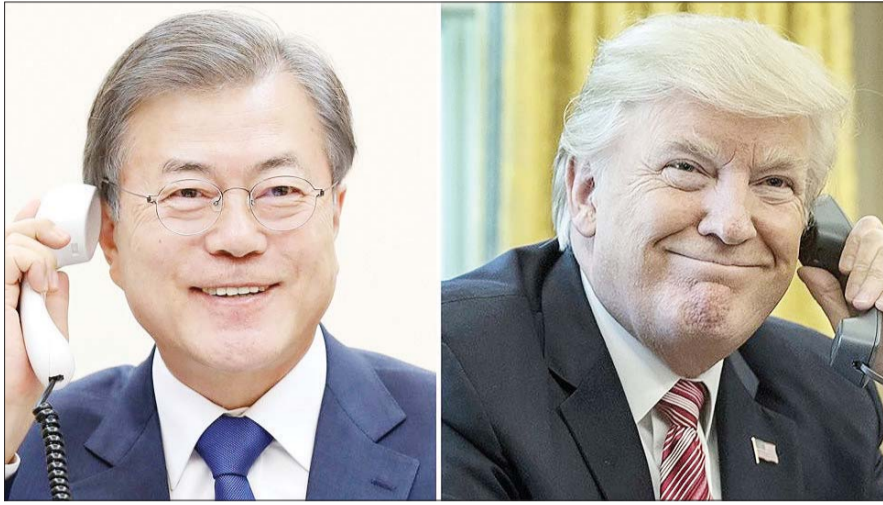
韓·北·美 대화궤도 이탈 막은 文의 ‘식량제공 카드’

文 대통령-美 트럼프 전화통화

한반도 ‘비핵화 협상안 논의’ 핵심 양국, 北 미사일발사 의견 등 공유

“대한민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매우 시의적절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언급한 발언이다. 한미정상회담은 당시 밤 10시부터 35분간 통화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기 비핵화 협상안’을 논의한 게 이번 한미정상회담 통화의 핵심이다. 앞서 북미정상은 지난 2월 말 베트남 하노이에서 비핵화를 골자로 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으나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한미정상이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식량제공 카드를 꺼내자 청와대는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모든 사안에 대해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라면서 “최근 WFP(유엔세계식량계획) 등에서 현재(북한) 어린이와 가족들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했다. (우리 정부도) 그 정도로(북한의 식량난을) 파악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적 기구를 통한 ‘국제적 지원’ 및 ‘직접지원(정부 차원)’ 등의 질문도 많이 왔다”며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며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땐 해당부처에서 관

련 발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 중 식량 제공 카드를 우선 제안한 쪽’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상간 통화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들까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며 “식량제공 문제에 대해서는 ‘무자르듯’ 누가 먼저 얘기했다가 아닌, 그 사안에 대해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구제적인 사안들까지 확인하는 게 어렵다”고 했다.

이와 관련 여론에서는 식량제공이 북미대화 재개의 고리가 될 것으로 진단했다.

설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때 “(북한이 4일 발사한 미사일은) 북미협상 교착 국면의 판을 흔들려는 정도의 의도일 뿐”이라며 “남북과 한미관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운을 뚫었다.

설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미국 역시 ‘미사일이나 아니냐’는 군사적 정의보다 그 행위가 갖는 정치·외교적 메시지

에 초점을 맞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또 미국은 긴급한 식량지원을 비롯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경제제재와 관련이 없다’며 북한과의 대화 국면 유지를 위한 유연한 입장도 밝혔다”고 했다.

설 최고위원은 “대북 인도지원은 남북-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고리 구실도 할 수 있다”며 “북한은 미국의 태도 변화만 기다릴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제안한 ‘제4차 남북정상회담’에 적극적으로 화답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이번 식량제공카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8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때 “지금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게 시의적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며 “국민들의 기대와는 다소 먼 얘기인 것 같다. 누구의 대통령인지 누구의 청와대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우승준 기자 dn1114@metroseoul.co.kr

“대우조선 매각 잘못됐다” 조선빅딜 제동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대우조선 매각반대 대책위 간담회 “해고 최소화위한 지혜 더 모을 것”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 결정을 두고 “잘못된 결정”이라며 ‘조선 빅딜’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째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황대표는 8일 오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옥포조선소에서 ‘대우조선매각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산업은행이나 일부 경영진, 일부 국가기관 관련자의 결정에 많이 의존해 결정이 이뤄진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해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를 더 모으겠다”며 “당 안에서 경각심을 갖고 정부



‘민생투쟁 대장정’에 나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8일 경북 통영시를 방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 촉구할 건 촉구하고, 임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우조선 최대주주 산은은 지난 1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조건부 업무협약을 맺었다. 산은은 당시 현대중공업과 ‘밀실협상’을 통해 일방적으로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우조선 매각을 반대하는 거제범시민대책위는 황 대표와의 간담회에 앞서 현대중공업 실사 저지 행동에 돌입했고, 천막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또 앞서 7일 급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매각 결정은 현대 재벌 특혜 매각”이라며 감사원에 이동결산은 회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 회장이 매각에 있어 일반경영대신 비밀협상을 통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 주식을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줬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과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위반으로 배임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뿐 아니라 현대중공업 노조 반발도 거세다. 노조는 물적 분할로 고용불안과 복지후퇴, 본사이전 등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민주당 원내대표에 이인영 당선

76표 받아... “따뜻한 사람 될 것”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당 사령탑에 올랐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246호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125표 중 76표를 받아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이 의원과 결선택했던 김태년 의원은 49표를 얻었다.

앞서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는 이인영 의원과 노웅래·김태년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원내대표 선거는 당내 현역 의원 128명 중 과반(65명)의 지지를 받아야 당선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넘은 후보가 없었고, 다득표자 2인을 두고 결선을 치렀다.

이 의원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선



봉에서 이끈 ‘강성 운동권’ 출신의 3선 의원이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초대 의장 출신이자 당내 386(50대·80년대 학번·60년대생) 운동권 그룹의 대표주자로 꼽힌다.

이 의원은 당선 후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되겠다”면서도 “강력한 여당을 만들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석대성 기자

경기 하방 우려에도... 野, 추경 반대

정부의 경기 하방 위험 확대 우려에도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가 자유한국당 등 야당 반대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특히 이번 추경을 ‘총선용 정치 추경’으로 평가하고 있어 재난 피해지원 추경도 난항한 실정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이 이번 추경을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부실·빚더미 추경 ▲예비비선(先) 집행 ▲정부의 경제 진단·처방 오류 등이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재정 지출(예산)’을 470조원으로 역대 최대로 편성했지만, 집권 2년 사이 세 번째 추경을 제안했다. 한국당은 이번 추경을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빚을 내 7조원 가까운 예산을 추가로 더 쓰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한



지난달 24일 국회 정관관에서 열린 ‘정책 실패 땀질 추경’ 관련 자유한국당 입장 기자회견에서 자유한국당 김광림 최고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또 국가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700조원인 것을 고려하면 세금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미세먼지와 포함 지진, 강원도 대형산불 피해에 대한 지원도 올해 예산에 든 예비비를 먼저 집행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입장이다. 예비비를 쓴 후에도 재원이 부족해 재정이 필요

하다면 그 때 추경 편성을 검토하는 것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당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졸속 편성한 추경을 발미로 미세먼지 대응과 재해복구에 소홀함이 있다면, 모든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석대성 기자

日-WTO 수산물 분쟁 등 판례·해설 공개

산업부, 국제분쟁 판례 포털 서비스

최근 일본과의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물 분쟁 승소 이후 통상을 포함한 각종 국제 분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문으로 작성한 판례·해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웹 서비스가 개설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www.disputecase.kr)’을 9일부터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포털에서는 ▲통상 분쟁(WTO)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국제사법재판소(ICJ), 상설중재재판소(PC A),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같은 일반 국제법 분쟁 등에 대한 국문 판례 해설을 한 곳에 모아 제공한다.

주요 판례에 대한 사건 개요 및 배경, 주요 쟁점 및 판결문 요지, 해설 및 평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검색 및 파일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다.

또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에 대한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투자 분쟁 이외에도 ‘국제 분쟁 판례 해설’ 메뉴를 추가해 일반 국제법 분쟁 판례 134건에 대한 해설을 포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포털은 통상 전문가들이 보다 용이하게 국제 분쟁 판례를 활용하고, 국제법 전공자들이 전문 능력을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분쟁 담당자뿐만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및 관련 학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